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서면, 공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2024. 11. 27.

관 계 부 처 합 동

I. 추진 배경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 예상**

- 조선·방산 등 분야에서 韓美간 협력 확대가 기대되나 美 무역적자 축소·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특히, IRA·반도체과학법 등 첨단산업 투자 관련 인센티브 축소, 보편관세 부과 등 정책기조가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 우려

□ **후발국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전환 등 도전과제는 여전**

- **(후발국 추격)** 주요 산업에서 중국 등 후발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기술격차 축소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협
- **(공급망재편)**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인접·우방국 간 블록화가 심화되며 우리 수출중심 경제에 불리하게 공급망 변화
- **(디지털·그린 전환)**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탄소저감 요구 확대

□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 가운데 우리 산업정책의 변화 요구 증가**

- 우리 산업정책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수단을 보유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부족
-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중이나 보조금 등 직접지원을 운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간접 지원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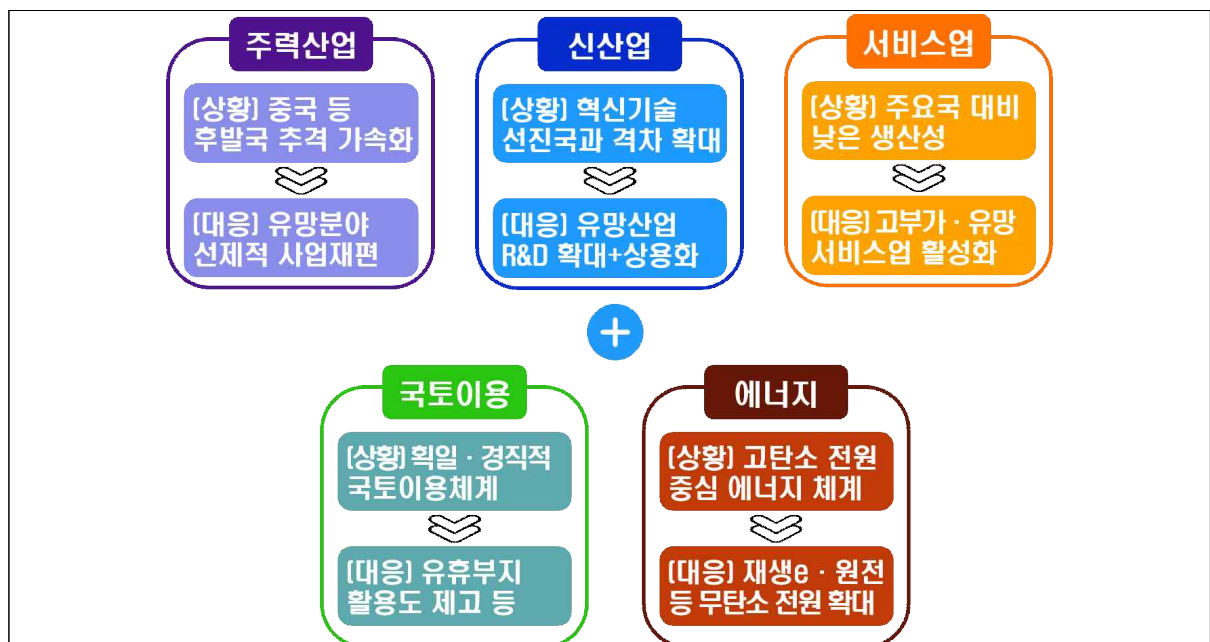
⇒ **美 신정부 출범으로 촉발된 글로벌 통상·산업환경 변화 등 도전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이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방향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신속 해결하고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 추진

- **(현안대응)** 美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부처간 공유하고 해결 지원
 - (통상) 관계부처 장관과 美 신정부 경제협력, 통상이슈 등 지속 논의
 - (산업)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안을 수렴하고 다부처 이슈는 부처간 실시간 공유하여 현안 해결 총력
- **(경쟁력 제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토이용 합리화,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 확충
 - 주력산업·신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대외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부가·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희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 모색

< 주요 산업별 여건과 대응방향 >



Ⅲ.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안)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

□ **(구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은 부처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운영(수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참석 장관 확대***

* (현행: 6명)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개편: 11명, 밑줄은 신규부처) 경제부총리, 과기·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 **(분과)** **관계부처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총괄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 운영

* 현재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는 기재부 1차관, 기업·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각각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이 주재 → 분과간 정합성 측면에서 차관급으로 변경 추진

○ (**총괄분과**^{기재부 1차관}) 투자 익스프레스(기재부 1차관+관계부처 차관) 등을 통해 업계 당면 현안을 취합하고 분과간 의견 조율 기능 수행

○ (**기술분과**^{과기부 차관})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 논의

○ (**산업분과**^{산업부 1차관}) 업종별 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별 지원방안,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방안 등 산업대책 논의

○ (**혁신분과**^{중기부 차관}) 대·중견기업 등과 벤처·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방안 논의

○ (**기반시설분과**^{국토부 1차관}) 입지·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 논의

□ **(여타 위원회와의 관계)**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위원회, 바이오 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간 이견조율 수행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편전후 비교 >

(파란색은 개편으로 변화될 사항)

구분	현행	개편(안)
참석자 ¹⁾ (상임)	경제부총리(주재), 산업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논의시제	단기 국내 현안대응	단기 국내외 현안대응 중장기 산업구조 개선
대상산업	경영애로 주력산업 ²⁾	신산업·주력산업·서비스업 등
논의사항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핵심 기술개발, 국토이용체계 개편, 서비스산업 육성
분과 ³⁾	경쟁력강화지원 분과(기재부1차관) 기업구조조정 분과(금융위원장) 산업구조조정 분과(산업부장관)	총괄 분과(기재부 1차관) 기술 분과(과기부 차관) 산업 분과(산업부 1차관) 혁신 분과(중기부 차관) 기반시설 분과(국토부 차관) 기업구조조정 분과(금융위 부위원장)

1) 필요시 논의 안건 관련 부처 장관 추가 참석

2) 훈령상 대상산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 대상을 의미

3) 각 분과에는 정부부처 외에도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도 추가하여 운영

IV. 향후 계획

- ☐ 정례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수시)하여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